

기획특강

생태위기 시대 산업전환과 지역노동의 역할

| 일시

1강 : 2023. 6. 8.(목) 16:00~18:00

2강 : 2023. 6. 15.(목) 16:00~18:00

| 장소

민주노총전북본부 중회의실

| 공동주최 |

차별없는노동사회네트워크



민주노총전북본부 부설
전북노동정책연구원

생태위기 시대
산업전환과 지역노동의 역할

프로그램 일정

1강(6월 8일, 목) : 생태위기 시대 정의로운 산업전환과 지역 노동의 역할

식순	시간	주요내용	발표자
개회식	16:00~16:10	· 개회	
발표 및 토론	16:10~17:30	· 특강) 생태위기 시대 정의로운 산업전환과 지역 노동의 역할	김현우
	17:30~18:00	· 청중 질의응답 및 토론	

2강(6월 15일, 목) : 자동차산업 전환과 전북 지역 노동의 대응

식순	시간	주요내용	발표자
개회식	16:00~16:10	· 개회	
발표 및 토론	16:10~17:30	· 특강) 자동차산업 전환과 전북 지역 노동의 대응	박태주
	17:30~18:00	· 청중 질의응답 및 토론	

생태위기 시대 정의로운 산업전환과 지역 노동의 역할

김현우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기획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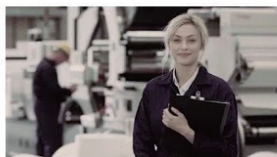
정의로운 전환과 노동

2023. 6. 8.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김현우

정의로운 전환의 이해



파리협정 이후 노동조합이 기후변화를 고민해야 하는 이유 / 유럽노총(2017)
<https://www.youtube.com/watch?v=jmCUHQ-dEj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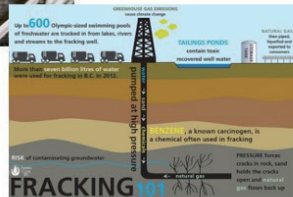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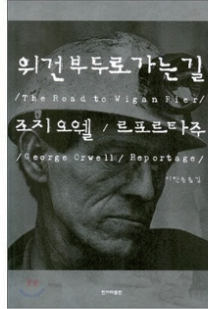


The Plan (루카스플랜 40주년 다큐)
<https://youtu.be/ZM8MQrEyQl8>



미국 토나완다의 정의로운 전환
<https://youtu.be/EoQcE-04qF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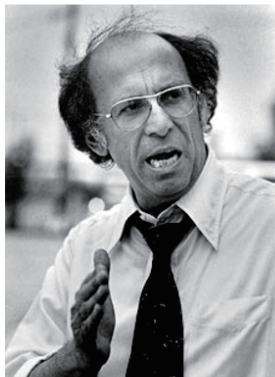
화석 자본주의와 노동자



기후위기 앞에서 환경(운동)과 노동(운동)의 공동전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가능할까?
어떻게 실현될 수 있을까?

3

정의로운 전환 아이디어의 시작



선진 노동자 토니 마조치 (Tony Mazzocchi)

- 에너지와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산업 재편 속에서 노동현장과 노동자가 희생되지 않고, 보다 노동친화적인 대안이 제공되어야 한다는 개념인 '정의로운 전환(Just Transition)'의 아이디어 제공
- 2차대전 직후 제대군인 원호법(GI Bill)과 1970년대 평화군축 운동에 대한 노동운동의 참여 경험
- 향후 지속가능한 경제에서는 화학, 정유, 원자력 노동자들이 일할 여지가 없다고 염려하고, 노동자들에게 안전한 일자리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1980년대 후반 '노동자를 위한 슈퍼펀드(Superfund for Worker's)'와 새로운 일자리를 위한 직무훈련 제안

4

캐나다 노총(CLC), 정의로운 전환의 원칙

- 공정함(Fairness) : 정의로운 전환이란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고용주가 공장 문을 닫을 때 노동자와 그 산업에 의존하고 있던 공동체를 정당하게 채워하는 것을 말함. 이는 도덕적으로 정치적으로 필수적인 것이다.
- 재고용 또는 대체 고용(Re-employment or alternative employment) : 정의로운 전환의 주요 목표는 임금, 혜택, 노동기간의 손실 없이 고용이 지속되는 것을 의미한다. 일자리는 최소한 보전할 가치가 있는 일이어야 한다.
- 보상(Compensation) : 고용의 지속성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정당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
- 지속가능한 생산(Sustainable Production) : 정의로운 전환의 핵심은 더 지속가능한 생산 수단과 그것을 지지할 수 있는 서비스 부문으로의 전환이 전제되어야 한다.
- 프로그램(Program) : 정의로운 전환은 시안에 따라서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될 수 있다. 그러나 반드시 발생하는 환경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적절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한다.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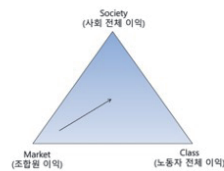
정의로운 전환의 확산과 발전

- 국제노총(ITUC)을 비롯한 국제 노동운동 역시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능동적 대안을 모색해왔고, 유엔 기후변화 총회 과정을 비롯하여 주요 산별 및 단위 노동조합, 그리고 지역 수준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대응해왔음.
- 2015년 파리협정 전문은 “각국의 발전 우선순위에 조응하여 노동력의 정의로운 전환과 관철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의 원칙을 고려할 것” 을 포함.
- ‘정의로운 전환’은 노동자와 지역사회가 갖는 취약성의 여러 측면들, 이를테면 일자리 영향에 관련된 불확실성, 일자리 상실의 위험성, 비민주적 의사 결정 과정의 위험성, 광역 경제와 지역 경제의 황폐화 위험성을 다루는 정책 제언의 패키지.
- 최근에는 환경정의 및 기후정의 운동과 관련해 인종, 성, 계층, 지역에 따른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사회적 전략으로 확장되고 있음.

6

정의로운 전환과 노동조합의 노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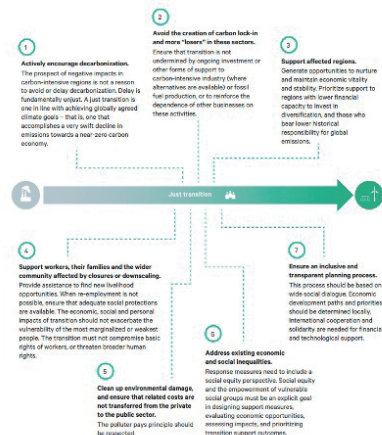
- 역사적으로, 정의로운 전환은 완전히 새로운 전략이라기 보다는 노동자 조직운동의 전개 속에서 사회적 노동조합주의가 생태위기와 접속하면서 형성되는 대응의 이념과 프로그램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함.
- 정의로운 전환은 그 자체로 생산적인 프로그램이고 아이디어이지만, 그 자체로 올바르게 퇴행 없는 변혁을 보장하는 개념은 아니며, 더 넓은 전환 속에서 기능하거나 스스로 발전하는 어떤 '모듈'로 바라볼 수 있을 것임.



7

기후변화 대응과 정의로운 전환의 기본 방향

- 적극적인 탈탄소화 고취
- 해당 부문들에서 탄소 잠금(carbon lock-in)과 더 많은 '패배자'를 만들어내지 않기
- 영향받는 지역들을 지원하기
- 폐쇄나 축소에 영향 받는 노동자, 가족과 더 넓은 공동체를 지원하기
- 환경 피해를 복원하고, 관련된 비용들이 민간 부문에서 공공 부문으로 이전하지 않도록 보장하기
- 기존의 경제적 및 사회적 불평등을 해결하기
- 포괄적이고 투명한 계획 절차를 보장하기



8

정의로운 전환의 유형

- 1. 현상유지 접근: 저탄소 사회로의 기업 주도의 전환 / 녹색성장
 - 영향을 받는 사람들에게 대한 보상, 퇴직연금, 일자리 재교육
- 2. 개혁관리 접근: 해게모니에 도전하지 않고, 기존 경제 체제 내에서 공평과 정의를 개선하는 전환
 -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서 고용 기회, 작업 안전 및 건강 측면에서 개선 추구
 - 에너지에 대한 접근권과 가격수용성 중시하나, 시민적 통제는 추구하지 않음
 - 국제노총: 공공정책을 통한 개혁관리 추구 / 현 경제 모델을 문제시하지 않음 / 사회적 대화와 노사정 협의 중시 / 각국 노총, 거대 환경단체, 진보적 기업 등
- 3. 구조개혁 접근: 경제 체제의 구조적 개혁을 추구 / 분배적 정의와 절차적 정의가 모두 지켜져야 함
 - 전환의 의사결정 과정에 포용적이고 공정하게 참여 / 새로운 에너지 시스템의 집단적 소유와 관리
 - 시장 권력, 전통적 과학기술에 의존하지 않고, 거버넌스 구조, 민주적 참여와 의사결정, 소유권 등을 포함하는 구조적 해법 모색
 - 전환은 단순히 피해자를 보상하는 문제가 아님, 제도와 구조 자체의 개혁이 중요
 - 노동자 에너지 협동조합이나 비영리 시민협동조합, 또는 TUED
- 4. 변혁 접근: 오늘날 사회-환경 위기를 만든 경제, 정치 시스템의 완전한 변화 / 성장주의 경제 체제와 인간-환경관계의 근본적 변화
 - 계급, 가부장제, 인종주의로 인한 모든 억압 시스템 없애기
 - 원주민환경네트워크(IEN), 정의로운전환동맹(JTA), 여성환경개발기구(WEDO)
 - 지향은 여러 저자와 단체에 확산, 그러나 방법과 성과는 아직 모호

9

체제전환과 노동의 전환

우리가 말하는 노동의 전환은 무엇인가? 노동으로부터의 해방(노동시간 단축, 노동 공유, 보편적 기본소득 등을 통한)과 노동의 해방(유급 노동의 내용과 방식의 변화) 모두를 다루어야 한다.

1. 수행되는 실제 노동의 변화 - 이는 화석연료 생산에서 재생가능에너지로, 비행기와 자동차에서 열차와 버스 생산과 정비로, 환경 파괴적인 활동에서 “사회적으로 유용한 생산”(Lucas Plan)으로의 전환
2. 노동의 성격 변화 - 속도와 경쟁에 종속되는 무의미한 반복적 노동에서 벗어나서 자아실현을 가능케 하는 인간적 노동으로의 전환
3. 보다 민주적인 작업장으로 전환 - 위계 구조를 작업장 민주주의로 대체하고, 노동자의 지식을 한 부문 내 의사결정의 기초로 사용하고, 소유권의 대안적 모델들(국유화, 지역 또는 광역, 공동체 기반, 노동자 소유 협동조합)과 민주적 책임성을 적극적으로 고취하고 진전시키기 (Degrowth & Strategy)

10

정의로운 전환의 현실



11

정의로운 전환이 나아갈 방향

- Go Big**
 기후-안전 경제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될 전환의 범위와 규모는 우리에게 과감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지역, 인구 및 산업 전반에 걸쳐 노동자와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을 다루는 포괄적인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
- Go Wide**
 전환은 또한 전반적이어야 한다. 노동조합과 기타 노동자 조직, 최전선 커뮤니티 조직, 원주민 공동체들이 전환 과정 전반에 걸쳐 깊이 관여할 것을 요구한다.
- Go Far**
 전환은 미래를 내다보아야 한다.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서는 노동자와 지역공동체에 대한 장기적인 지원과 투자가 필요하다. 전환을 위해서는 세대 차이에 대한 관심도 필요하다.



- 방어할 수 없는 것을 더는 방어하지 말라
- 일관성을 가져라
- 조합원들에게 이야기하라
- 적이 아니라 친구들하고 동맹하라
- 담대한 정책 대안을 제안하라 (TUED의 손 스위치)

12

잭 먼데이와 '그린 밴'



- 1970년대 초, 잭 먼데이 등 호주 노동자들이 펼친 '녹색 금지(Green Ban)' 캠페인. 환경단체들의 요청에 따라 자연환경 및 역사적 유적을 개발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작업장을 봉쇄. 이런 전통은 1980년대 철도, 부두하역 노동자 등의 우리농 운송저지 투쟁으로 이어짐.

노동조합이 자본의 요구에 반하여 지역사회와 환경을 살리는 '적극적 거부' 운동에 나서다

13

루카스 플랜과 사회적으로 유용한 생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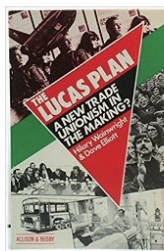
Engineers

Mike Coole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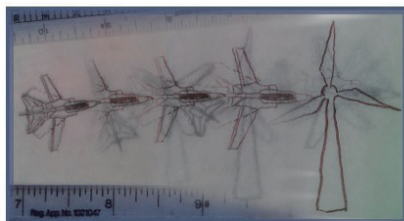
"Science and technology is not given. It was made by people like us. If it's not doing for us what we want, we have a right and a responsibility to change it. We need a clear view of what we want for science and technology and the courage to stand up and do something about it."

"Tegensigten skal ikke være industriens Enkeltmand og sig: 'Det gjorde kun hvad jeg fik bestilt på'."

Architect or bee? : the human/technology relationship. Langley Technical Services, 1980.



- 1970년대 초, 영국 루카스 항공사에서 벌어진 "사회적으로 유용한 생산" 운동을 주도한 마이크 콜리
- 군용 항공기 부품을 생산하던 공장의 구조 조정에 맞서 노동자 조직, 좌파 활동가,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적 협동 계획을 작성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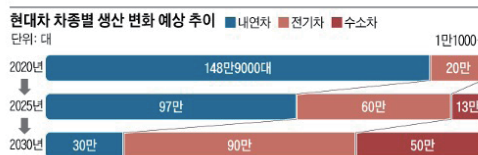


전투기 대신 재생에너지 설비를! 기후위기 시대에 루카스 플랜은 다시 현 재성을 갖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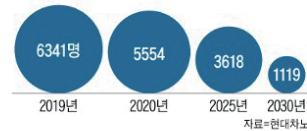
14

미래차와 국내 자동차 산업의 고용

- 금속노조·현대차지부·기아차지부(2019)의 연구에 따르면, 전기차 생산 비중이 확대되면 국내 1만 여개의 자동차 부품업체에 중 28%에 해당되는 2,886개의 부품업체가 부정적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정
- 기술 변화의 부정적 영향을 많이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업체들이 오히려 대응 자원이거나 역량이 미약한 상태
- 미래차로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서는 기술 변화가 노동자 그리고 전체 사회에 이로운 것인지 해로운 것인지 하는 논의가 우선되어야, 몇 명의 인원을 축소시킬 것인가에서부터 출발해서는 안 됨 (황현일)



현대차 고용 인원 변화 단위: 명
※내연차 감소와 전기·수소차 확대에 따른 엔진·변속기·소재사업부 인원 변화 예측



17

북미 간호사 노조와 기후행동

- 2012년 허리케인 샌디가 미국 뉴욕을 강타하면서 단전과 단수 사태가 발생. 병원 노동자들은 피해를 겪고 열악한 상황 속에서 피해 지역의 복구와 부상자의 응급 치료에 참여하면서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 사회와 기후변화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인식하게 됨. 이후 간호사 노동조합은 기후변화에 관한 조합원 교육을 시행. 이러한 사전 작업을 바탕으로 2014년 9월 뉴욕 기후 민중행진과 지난해 기후파업에 많은 조합원이 참여



“병원에서 일하던 조합원들은 홍수와 정전이 발생하자 환자들을 대피시켜야 했고, 불이 꺼진 병원 복도에서 밤새 환자들을 지켜야 하는 일도 생겼어요. 샌디 복구 작업에도 노조가 나섰는데, 이런 활동이 기후변화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는 계기가 되었죠.”

“에너지민주주의노조네트워크에 교육 프로그램을 의뢰해서 조합원들을 교육에 참여시켰어요. 먼저 점심 때 한번 진행했는데, 시간도 짧고 내용이 어려울 것 같아서 반응이 어땠지 궁금했죠. 그런데 첫 번째 교육에 85명의 조합원들이 참여했어요. 이걸 보고 노조가 기후변화 사업을 진행하기로 결정했고, 지금까지 여러 병원에서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요.”

- SEIU동부보건의료지부 부지부장 에스텔라 바스케스

18

보건의료 노동자의 기후정의 요구

- 보건의료 분야에서 가장 건강한 개인과 지역사회의 환경을 조성해야 할 필요
- 기후변화는 여러 수준에서 환자와 지역 사회를 위협
- 기후변화는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가장 큰 공중보건 문제
- 증가하는 환자, 비상상황 대비에 있어 지역 보건의료 노동자의 역할
- 에너지, 먹거리, 인프라 등 복합적인 상황에 대비해야
- 간호사 등 보건의료인 네트워크의 역량, 학습, 운동과 정책 개입
- ANHE(건강한 환경을 위한 간호사 연합), Nurses Climate Challenge의 사례. 기후변화와 건강 교육 확산



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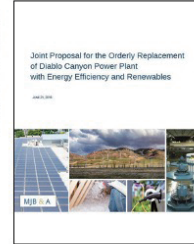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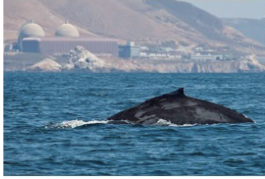
영국 지자체 노조와 기후변화

- 노동조합으로서 UNISON(영국 공공서비스 노동조합)은 친환경 정치를 위한 캠페인을 펼치고, 직장을 보다 지속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 사용자와 협력하고, 조합원들에게 지구 온난화 문제를 알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
- UNISON 조합원들은 공원, 에너지 및 물 회사, 환경 기관, 육류 위생 서비스, 환경 보건, 학교급식, 버스 및 운송, 청소, 폐기물 재활용 및 계획에서 직접적인 환경 역할을 하는 다양한 직업에서 일하고 있음
- 보건 서비스(NHS), 지방정부, 경찰, 소방 및 구조, 교육, 주택 및 자원 봉사 부문에 걸쳐 각기 다른 역할을 하는 UNISON 조합원들은 오염, 극단적인 날씨, 홍수, 한파 등환경 변화의 영향을 직접 경험함
- UNISON은 기후변화 인식 제고, 사무실과 건물의 녹색화, 녹색 케이터링, 재생에너지 확대, 녹색교통 이용, 위기 상황에 대비하는 공공 서비스와 인력 확충, 오염산업에 대한 공적 기금 투자 철수, 법률 재개정 요구 등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음



20

미국 디아블로 캐년의 정의로운 전환 합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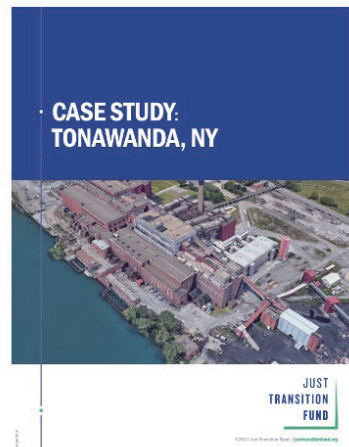


- 1985년에 가동을 시작한 미국 디아블로캐년은 연간 1,800GWh의 전기를 생산하고 캘리포니아 전력 수요의 8.6%를 담당한다. 환경 단체들은 건설 시기부터 단층 활동 등을 이유로 안전성을 염려하며 반대 운동을 벌였고 법률 소송도 일어나곤 했다. 이 발전소를 운영하는 PG&E는 1,200명의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으며 협력업체에도 200명의 노동자가 있다
- 2016년에 사측에서는 연장 운전시의 경제성 하락과 주 정부의 에너지 정책 변화를 예상하며, 면허 갱신에 부정적인 전망을 보였고 이를 인지한 노동조합은 대화에 나섰다. 그 결과 디아블로캐년의 가동을 8-9년 연장한 뒤 폐쇄하고, 조합원들은 발전소 가동 중단에 따른 보너스 등 보상을 받으며 지역사회도 줄어드는 세수만큼을 사측이 보전해주는 합의에 도달했다. 동시에 사측은 재생가능에너지와 에너지 효율 설비를 구축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노동자들은 직업 훈련을 통한 전환을 준비하며, 지역사회는 경제와 세수를 다변화하는 과제를 안게 되었다

21

헌틀리 동맹과 대안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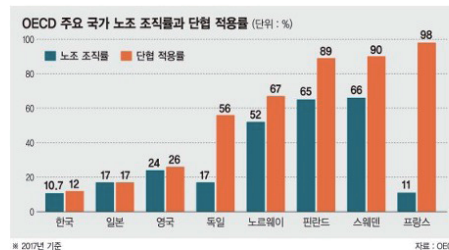
- 헌틀리 동맹(Huntley Alliance)은 지역 경제를 안정시키고 버팔로 시의 백인 노동계급 교외인 토나완다(Tonawanda) 마을이 석탄발전소라는 주요 수입원을 잃었을 때 기반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창립.
- 지역공동체 기반 환경단체인 CAC(서부 뉴욕 청정공기 연합)는 마을의 석탄화력발전소로부터 오는 수입 하락으로 인해 이미 실직을 경험한 서부 뉴욕 노동자 연맹(WNYALF) 및 지역 교원노조와 대화를 시작.
- CAC, 교사, 여러 블루칼라 노동조합, 일반 노동자, 시 공무원, WNYALF가 만나서 2년 동안 마을 사람들을 조직화 함.
- 주 범위 기금을 조성하는 입법 요구를 가지고 주민을 만나고 로비스트를 고용하여 주 대표와 협상 시작. 공직자들도 호응했고, 수백 명의 마을 사람들의 참여 속에 지역 재구성 프로그램이 만들어짐.
- 석탄 발전소의 노동자들은 아무도 실업 상태에 빠지지 않고 전환할 수 있었고, 이 모델은 다른 도시들로 확산됨.



22

한국 노사관계: 낮은 조직률과 단협 적용률

- 2020년 현재 노동조합 조직률은 14.2%(19년 12.5%), 전체 조합원 수는 2,805천명('19년 2,540천명)
- 조직 형태별 조합원 수는 초기업노조 소속이 1,695천명(60.4%),기업별노조 소속이 1,109천명(39.6%)로 최근 산별노조 소속이 약간 늘어남
- 상급단체별로는 한국노총 1,154천명(41.1%), 민주노총 1,134천명(40.4%), 미가맹(상급단체 없음) 노동조합 417천명(14.9%)으로 양대 노총이 수위를 다툼
- 단체협약 적용률은 2017년 기준 10.7%로 OECD 국가 중 최하위권 속함



25

87년 노동체제의 한계

- 기업별 노동조합의 교섭 결과가 기업 울타리 안에 있는 조합원들의 단기적 고용안정과 임금근로조건 향상에만 영향을 미칠 뿐 울타리 밖을 벗어나지 못했고, 비정규직이나 협력업체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향상에 기여하지 못하고 노동시장 양극화에 일조함
- 이를 극복하기 위해 90년대 후반 이후 사회운동적 노동조합주의 노선, 연대성과 계급성 회복 요청 등 다양한 논의가 전개됨
- 그러나 '전투적이면서 실리적인' 노동운동 노선이 의도하지 않게 고착화되고,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상호 견제 및 정부의 선택적이고 단기적인 노동조합 동원과 활용 속에 한국 노동조합운동은 변혁적 동력을 잃고 자기방어적인 관성을 갖게 되었다고 비판 받음
- 한국의 노동조합 조직률은 10% 남짓으로, 노동조합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범위는 일부분으로 한정돼 있어서, 나머지 90%에서 발생하고 있는 청년 일자리 실업 문제, 비정규직 문제 등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관심 제고 필요
- 이러한 배경은 산업의 디지털화, 플랫폼화, 기후위기에 따른 산업재편 등 새롭고 불확실성이 큰 이슈 대응에 둔감하거나 소극적인 이유 중 일부임

26

노동조합의 기후위기 대응 전략 활성화

- 최근에 한국 노동조합에서, 특히 산별 단위에서 정의로운 전환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변화가 시작됨
- 2021년 민주노총과 사무금융, 보건의료노조 등 산별 조직에서는 대의원대회에서 기후위기와 관련한 특별 결의안을 채택함. 작년부터 민주노총과 금속노조 교육 단위에서는 기후위기와 정의로운 전환 주제의 교육 사업을 소속 노동조합에 안내하고 제공
- 특히 민주노총 금속노조에서는 '민주적이고 정의로운 산업전환 위원회'를 기후 정책의 영향을 받는 부문과 지역별로 구성하고, 관련 대책을 노사가 공동결정하자는 요구를 정부에 내놓고 사회적 캠페인을 시작. 에너지 노조, 철도 노조, 보건의료 노조, 일부 지역본부도 정의로운 전환을 정책과 사업에 포함
- 금융노조는 산별 교섭에서 사용자의 감염병 필요 조치 의무와 사용자의 기후변화 대응노력 의무를 신설
- 한국노총은 산별 정책 담당자들을 중심으로 기후노동네트워크를 구성하고, 경사노위의 기후위기와 산업노동 전환 연구회에 참여하고 있음
- 한국노총은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노동이 만드는 정의로운 전환"이라는 제목의 선거 정책 요구안을 작성했고, 여기에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정의로운 전환 요구를 포함함

27

정의로운 전환의 추진 방향

- 정의로운 전환은 피해 예방과 보상 수준을 넘어, 더 나은 일자리와 지역사회를 취한 청사진이 되어야 함
- 또한 정의로운 전환 전략과 과제는 준비 단계, 폐쇄 단계, 회복 단계로 구분이 가능하되, 각 단계의 핵심적인 과제 확인 필요



*충남연구원 (2021)

28

정의로운 전환 전략 사례 (충남 탈석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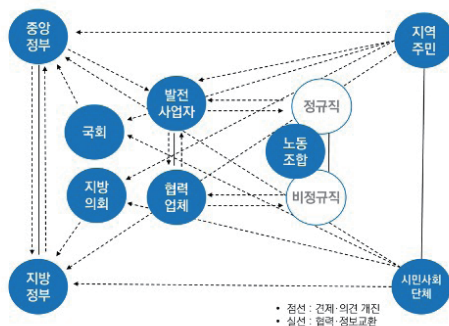
- 충청남도의 정의로운 전환 전략을 산업 다양화, 노동자 지원, 지역사회 지원, 복원 및 재생, 추진기반조성의 다섯 가지로 제시함

전략	주요 내용
전략 1 산업 다양화	○ 새로운 산업(에너지, 환경, 해양 등) 육성 ○ 지역경제의 산업전환 역량 구축
전략 2 노동자 지원	○ 기존 산업부문 노동자를 위한 지원 ○ 새로운 산업부문 노동자를 위한 육성
전략 3 지역사회 지원	○ 주변지역 및 영향지역의 쇠퇴에 대한 대책 ○ 지역사회의 지역전환 역량 구축
전략 4 복원 및 재생	○ 환경 및 건강 영향에 대한 감시·모니터링·대책 강화 ○ 폐부지 및 폐시설에 대한 깨끗하고 안전한 복원 및 지역 발전을 위한 자산으로 재생
전략 5 추진기반 조성	○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사회적 대화를 통한 합의 및 계획 직접 참여(위원회 등) ○ 장기적인 전환 과정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법, 예산)과 전담조직 필요

29

정의로운 전환의 이해당사자

- 정의로운 전환은 지역과 부문의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상호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야 함
- 각 이해당사자 내에서도 세부적인 입장의 차이가 존재하며, 이를 확인하고 쟁점을 풀어주는 과정이 정의로운 녹색 전환 과정이기도 함
- 이들의 관계는 견제(대립)·의견 개선·협력·정보교환, 운동의 조직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남



30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

- 2050년 탄소중립 추진전략, 공정한 노동전환 지원 방안, 탄소중립기본법 등에 정의로운 전환 원칙과 정책이 포함되기 시작.
- 2021년 9월 제정된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에도 '정의로운 전환' 규정이 포함
- 탄소중립 기본법에서는 정의로운 전환에 관하여 기후위기 사회안전망의 마련,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의 지정, 사업전환 지원, 자산손실 위험의 최소화, 국민참여 보장을 위한 지원, 협동조합 활성화, 정의로운 전환 지원센터의 설립 등의 시책을 제시하고 있으나, 그 내용은 원칙적이고 추상적 수준임
- 기본법은 전환으로 인한 피해 복원과 지원을 위한 비용을 부담 책임 주체, 불평등 해소 방안, 포괄적인 정의로운 전환 계획의 작성 투명성과 형평성 보장 장안 등이 명확하지 않음. 또한 탄소중립이 우선적으로 강조되면서 정의로운 전환을 중심으로 다루는 별도의 위원회, 사무국, 계획, 기금 등의 내용도 부재함 (탄소중립위원회 내의 공정 전환 분과위원회는 정의로운 전환뿐만 아니라 에너지 분권, 기후변화 적응 등을 모두 다루고 있음)

31

정의로운 전환 법안 (심의중)

- 정의로운 전환의 구체적인 실현 지원을 위해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노동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 '정의로운 일자리 전환에 관한 법률안'(강은미 의원), '산업전환시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임이자 의원) 등 세 개의 법안이 환노위에서 심의 중임
- 강은미 의원 대표 발의안은 정의로운 전환에서 노동자와 취약계층 등 핵심 이해당사자가 산업전환 계획 수립 및 이행과 관련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되어 있는 것을 바로잡을 것을 강조.
- 또한 노동자와 취약계층이 능동적 주체가 아닌 단순히 보호와 시혜의 대상에 머문다면, 기후위기 대응과 기술변화에 따른 전환의 과정은 기존의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확대 재생산하는 과정이 될 수밖에 없다는 문제의식.
 - 정의로운 일자리 전환의 과정에서 지켜야 하는 기본 원칙을 규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후위기와 디지털 기술변화에 대응하는 정책을 수립·이행하도록 책무를 명시
 - 5년마다 정의로운 일자리 전환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
 - 사용자가 사업에 관한 중요한 계획 수립 및 결정을 하는 경우 노동조합 등과 공동 결정하도록 하고, 노동조합 등에 정보를 제공하도록 의무를 규정

32

정의로운 전환의 지역 전략 수립

- 정의로운 전환은 누구의 과제인가, 즉 주체의 규정을 분명히 하고 출발해야 함
- 이 주체와 함께 정의로운 전환 기획이 목표하는 바를 정리할 수 있다면 지역 전략의 절반은 나온 것임 => 광의의 전략
- 세부 전략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 협의의 전략
 - 장애물의 파악, 자원과 기회의 확인
 - 프로그램, 전투의 기획
 - 주체의 구체화와 확장 (<- 주체의 전환역량 확보)
 - 주체의 내러티브(스토리) 만들어보기
 - 행동 계획의 작성 (다양한 시간, 공간, 조직적 범위)
- 탄소중립 녹색성장법 및 시행령과 공정 전환 지원에 관한 중앙/지방 정부의 정책과 제도는 충분히 고려하고 활용되 거기에 얽매이거나 국한되어선 안 됨. 자율성, 유연성, 진보성, 자립 능력을 확보 해야
 - 고용상태 영향조사
 -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의 지정, - 정의로운전환 지원센터의 설립 · 운영
- 위원회, 조례, 기금은 중요하지만 수단일 뿐, 결국은 주체의 구상과 역량, 지속적 운동이 관건임

33

정의로운 전환 전략을 위한 질문들

- 맥락: 어떠한 계기나 상황으로 인해 정의로운 전환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 배경: 기후위기/산업전환과 관련하여 사업장/지역 등의 현재는 어떠한가.
- 문제의식: 나는 나의 사업장/지역에서 정의로운 전환의 단초와 전략을 마련해야 하겠다.
- 전환 역량: 정의로운 전환을 둘러싼 주객관적 역량의 배치와 특징을 파악한다.
- 전략과 수단: 나의 사업장/지역의 특성과 조건에 근거한 ① 전환의 전략, ② 가용 수단과 방법론(조직화, 교육, 조사, 체험, 단협, 제도화, 투쟁 등 다양한 방법)을 도출한다.
- 미래: 나의 사업장/지역의 0년 후 정의로운 전환의 미래를 상상한다.
- 행동계획: 무엇을 누구와 어떻게 해 볼 것인가?

34

정의로운 전환과 전환 역량

- ‘전환 역량’은 이론적으로 정리된 개념은 아니지만, 정의로운 전환을 기획하고 소화할 수 있는 주체와 주체가 동원할 수 있는 자원의 역량을 총괄적으로 지칭함.
- 전환 역량이 없다면 정의로운 전환의 논의 자체가 시작될 수 없으며, 역량의 구축부터 시작하거나 기획과 역량 확보를 병행해야 함.
- 전환 역량은 노동자(조직) 뿐 아니라, 기업, 정부, 지역사회의 역량까지를 포괄함. 이러한 역량 구성과 요소의 적절성은 조사와 전략 수립 과정에서 피드백되어 보충될 수 있음.

역량 \ 주체	정부(중앙/지방)	기업(단체)	노동(조합)	지역(시민사회)	기타
상황인식					
JT 수용성					
비전/정책 (4가지 유형)					
난점/전략					
비고					

35

디아블로 캐년 사례의 전환 역량 분석

역량 \ 주체	정부(중앙/지방)	기업(단체) PG&E	노동(조합)	지역(시민사회)	기타 FOE
상황인식	뜨거운 감자, 선택지 필요	어차피 연장은 시장성 없음	대안이 있다면 불확실성 줄이는 게 나음	폐쇄 필요하지만 지역경제 우려	적극적 대안 제안 의향
JT 수용성	대안 있다면 가능	대안 있다면 가능	확실한 보장 있다면 가능	대안 있다면 가능	-
비전/정책	현상유지	현상유지	현상유지	개혁관리	개혁관리
난점/전략	비용, 기획 전담은 곤란	전환 과정과 이후 경영의 불확실성. 환경단체와 지역 동의할 수 있는 기획	전환 과정과 이후 고용의 불확실성. 자체 기획 역량 부족	여론과 운동의 동력, 전환의 기술/시장에서 성공 여부	재생에너지 단지 기획으로 설득 가능
비고	-	전향적 실험이 가능한 기업 역량(?)	두드러진 정치노선 없는 실용주의 노조	-	디아블로캐년 반대운동의 역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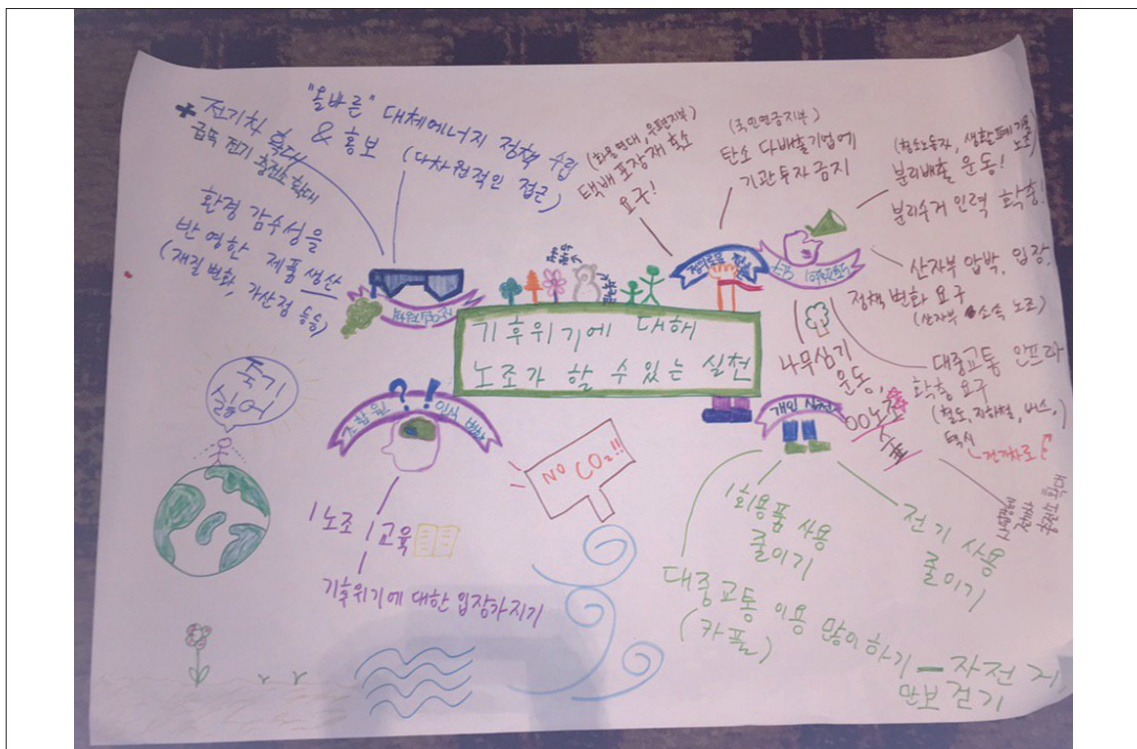
36

정의로운 전환과 연대의 확장

- 1. 노동자 내부: 정규직-비정규직, 탄소집약-탈탄소 산업, 대기업-중소(무노조) 노동자 사이의 연대
- 2. 노조(조직화된 노동자)-지역(시민)사회 사이의 연대
- 3. 현재세대-미래세대 존재(노동) 사이의 연대
- 4. 기존의(정형화된) 노동-보이지 않던(돌봄) 노동 또는 비노동 사이의 연대

정의로운 전환은 노동조합과 노동자의 사회적 연대의 확장으로 이어져서 노동의 전환을 다각도로 구체화해야 함. 이는 노동자의 전환 역량을 키우는 것이면서, 사회 전체의 전환 역량을 확보하는 것이기도 함.

25



자동차산업 전환과 전북 지역 노동의 대응

박태주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선임연구위원)



자동차 산업의 정의로운 전환

2023.6.

박태주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선임연구위원

60+기후행동 운영위원



INDEX

- | | |
|----|-------------------------------|
| 01 | 들어가며 |
| 02 | 기후변화가 노동자에게 미치는 영향 |
| 03 | 정의로운 전환 |
| 04 | 자동차 산업의 패러다임 변화: 전기차에서 탄소중립으로 |
| 05 | 현대차의 탄소중립전략 |
| 06 | 노동조합의 대응 |
| 07 | 맺음말 |
-



1

들어가며

1. 심화되는 기후위기

- IPCC(유엔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제6차 평가보고서 종합보고서(2023.3.21.)
- 온실가스 배출을 통한 인간 활동은 전 지구 지표 온도를 1850~1900년 대비 현재(2011~2020년) 1.1°C로 상승시켰으며,
- 지속되는 온실가스 배출로 인해 온난화가 심화되어 거의 모든 시나리오에서 가까운 미래(2021~2040년)에 1.5°C에 도달할 것이다.
- 단기 대응은 지속가능발전을 향한 적응 행동과 완화 행동을 통합한 기후탄력적 개발(climate resilient development) 경로의 중요성을 적시한다.
- 모든 부문에서의 재분배 정책, 사회안전망, 형평성, 포용성 그리고 정의로운 전환은 보다 큰 사회적 의욕을 가능하게 하고 지속가능발전목표와의 상충효과 문제를 해결한다.
- 산업 부문 감축을 위해 △수요관리, △에너지 및 자재 효율성, △순환 자원 흐름, △저감 기술, △생산 공정의 혁신적 변화가 필요하다.

안토니오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 “인류, 기후 지옥 가는 고속도로서 가속페달 밟아”...‘협력이나 멸종이나 택하라’ 경고 “우리는 ‘기후 지옥’으로 향하는 고속도로 위에서 가속 페달까지 밟고 있는 상황”이라며 “인류는 협력할지, 멸종할지를 선택할 수 있다. 기후변화를 연대로 극복하든지, 집단자살을 택하든지 둘 중 하나”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기후변화는 더는 미룰 수 없는 현세기의 중심 과제”라며 감축, 적응, 손실과 피해, 재원 등 분야에서 전 세계가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COP 27, 2022).

한국 기후위기 대응은 '꼴찌' 수준 ..."재생에너지 목표 감축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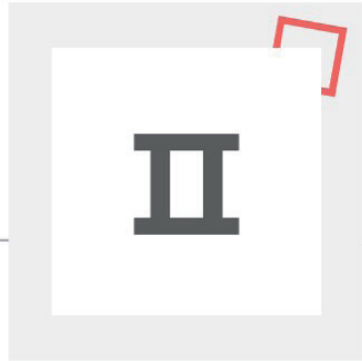
국제평가기관 저먼워치(Germanwatch), 기후 연구단체 뉴 클라이밋 연구소(New Climate Institute) 등 국제 시민단체는 14일 전 세계 온실가스의 92%를 배출하는 59개국과 유럽연합의 기후변화 대응을 평가한 2023 기후변화대응지수(Climate Change Performance Index, 이하 CCPI)를 발표했다.

한국의 올해 CCPI는 유럽연합을 포함한 60개국 평가 순위에서 60위로 조사대상국 최하위권이었다. 1~3위는 평가 기준을 충족하는 나라가 없어 빈자리로 남겨졌다. 한국보다 대응지수가 낮은 국가는 카자흐스탄, 사우디아라비아, 이란뿐이었다.

보고서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18년 대비 2030년까지 40%로 감축하겠다는 상향안은 환영한다"라면서도 재생에너지 비율을 2030년까지 30%에서 21.5%로 하향 조정한 것을 비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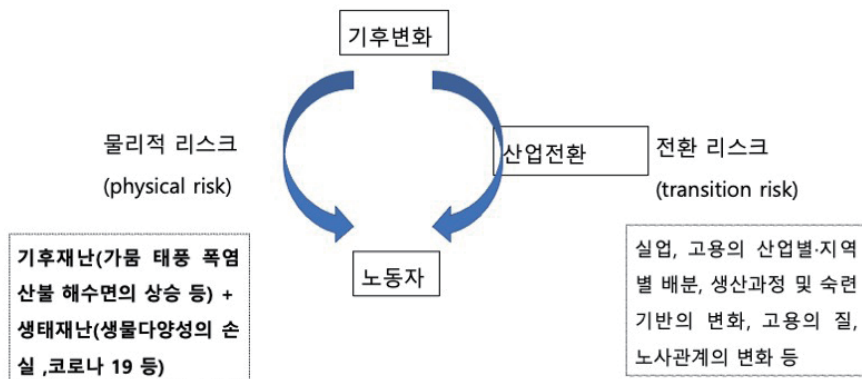
2. 질문

- 기후위기는 노동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 노동조합은 기후위기 대응의 주체(climate actors)가 될 수 있는가
- 노동조합은 '정의로운 전환'을 제대로 실행하는가
- 일자리를 위한 지향, "그린뉴딜인가 탈성장인가"
- *
- 자동차 산업의 패러다임 전환
 -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 전기차에서 탄소중립으로
- 신국제기후·통상질서의 수립
- 한국의 완성차 및 부품, RE 100 실현이 가능한가?
- 노동조합의 대응은?



기후변화가 노동자에게 미치는 영향

1. 노동도 피해갈 수 없는 기후위기의 영향



2. 지체된 대응, 증폭된 충격

-기후위기의 관점에서 바라본 한국경제의 특징

- 에너지 다소비업종: 철강 반도체 조선 IT 배터리 등
- 수출의존적 산업구조
 - 신국제기후질서의 형성
- 지체되고 느슨한 대응 → 국제적으로 증대되는 압력 → 가파른 대응이 불가피
 - 충격의 증폭(기후절벽)
 - 특히 신재생에너지의 낮은 비율(에너지 전환의 지체)는 심각한 실정
- 노동조합의 낮은 대응력
 - 낮은 조직률, 기업별 체제, 정책적 의사결정과정에서의 배제 등
 - 취약노동자에게 충격이 집중될 수도

3. 신국제기후·통상체제의 대두

- 기후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지구적 차원에서 채택한 일련의 협약과 제도, 정책 등
- 협약: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1992), 교토의정서(1997), 파리협약(2015) 등
 -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제출, 2030년까지 2018년 배출량 대비 40% 감축안 제시
 - 진전의 원칙: 차기 NDC 제출 시 기존 NDC 보다 진전된 목표 제시
- 지역(EU)·국가차원의 규제
 - 탄소국경조정제도
 - 미국의 IRA법*, 유럽의 그린딜(핵심원자재 법, 탄소중립산업정책법) 등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산업정책으로 활용 → 한국 전략산업의 대미투자 급증, 국내 공동화 우려
- * 총 4,330억 달러 규모, 기후변화 대응 분야에만 3,690억 달러 지출
- ※ 녹색 보호주의의 대두: 환경보호를 명분으로 자국산업과 일자리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 동시에 기후위기 대응에 미온적인 국가에 대한 제재
-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탈을 쓴 기술패권경쟁”
- 민간 규제: RE100, ESG 경영(TCFD, SBTi, UNGC, 지속가능성보고서 등),

<표> IRA 법에 따른 한국 전략산업의 대미투자

품목	회사	지역	규모	비고
반도체	삼성전자	파운드리 공장 건설	250억달러	
		텍사스 반도체 11공장	1900억달러	※향후 20년간
	SK 하이닉스	연구개발협력 및 반도체 패키징	150억 달러	
배터리	LG 에너지 솔루션	오하이오	45GWh	운영중
		테네시	50GWh	2023년 가동예정
		미시간	50GWh	2025년 가동예정
		미시간	20GWh	운영중
		애리조나	43GWh	2025.2026 가동예정
	SK온	오하이오	43GWh	2023년 가동예정
		테네시	43GWh	2025년 가동예정
		켄터키	43GWh	2025년 가동예정
		켄터키	43GWh	2026년 가동예정
		조지아	9.8GWh	운영중
		조지아	11.7GWh	2023년 가동예정
		조지아	35GWh	2025년 가동예정
	삼성SDI	인디애나	23GWh(Stellantis)	2025년 가동예정
		지역미정	30GWh(GM)	
	현대차-SK온	조지아	50억달러	배터리;셀공장
	현대차-LG엔솔	조지아		
전기차	현대차	조지아	전기차 30만대 규모 전용공장 건설	2025년 상반기 가동예정
		※로보틱스 개발. UAM 개발(슈퍼널), 모셔널 합작설립(자율주행), 보스턴 다이내믹스 인수(로봇)		

III

정의로운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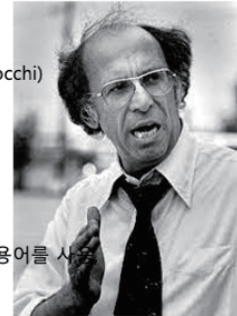
1. 정의로운 전환에 전개

○ 기후위기에 대한 노조 대응전략에서 지배적인 담론은 '정의로운 전환'(Just Transition).

→ 일자리와 환경 사이의 대립 프레임을 변화하고 공공적인 개입을 촉구

○ 기원

- 이론적 탐구의 산물이 아닌 노동운동의 대응으로 탄생(구준모)
- 미국의 석유·원자력·화학노조(OACW)의 지부 위원장을 역임한 토니 마조치(Toni Mazzocchi)
- 1973년 Shell사에서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환경파업
- 노동자, 주민의 협력으로 우라늄이나 비소와 같은 독성물질을 배출하는 생산시설을 폐쇄하는 대신 건강한 일자리와 환경, 삶을 확보
- 1990년대 초반 Super Fund를 제안
- 1995년 리오폴드와 콜리는 5대호 수질에 관한 국제 컨퍼런스에서 '정의로운 전환'이라는 용어를 사용



○ 확산

- OACW(1997), 캐나다 노총(CLC, 2000), 영국노총(TUC, 2007) 등이 '정의로운 전환'을 운동방식으로 채택
- 2010년에는 국제노총(ITUC)과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2010)이 이 개념을 수용한 데 2015년에는 파리협약 전문에 포함.
"각국의 발전 우선순위에 조응하여 노동력의 정의로운 전환과 괜찮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 원칙을 고려할 것"
- 2018년 폴란드 카토비체에서 열린 제24차 기후총회(COP 24)에서 '연대와 정의로운 전환 실레시아 선언'(Solidarity and Just Transition Silesia Declaration) 역시 이런 흐름에서 발표.
- 산업차원에서도 화학부문에서 에너지부문으로, 교통운수, 건설, 서비스, 의료 등 경제의 전 부문으로 확산.

예)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정의로운 건강전환, 정의로운 디지털 전환 등

2. 정의로운 전환의 개념(개념 구성)

○ 정의로운 전환(Just Transition)

- 이행의 과정에서 정의의 실현, 즉 환경정의와 사회정의의 조화 및 동시적인 실현

※"고용과 환경의 딜레마'(Environment vs. employment dilemma)의 극복

○ 구체적으로는 탄소중립의 실현 + 일자리의 창출 + 불평등의 완화

※기업 내 일자리 보장이라는 협소한 개념으로 이해?

(참고)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

"정의로운 전환이란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직·간접적피해를 입을 수 있는 지역이나 산업의 노동자, 농민, 중소기업인 등을 보호하여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담을 사회적으로 분담하고 취약계층의 피해를 최소화 하는 정책 방향을 말한다"(제2조 13항).

3. 정의로운 전환의 구성

○ 기후정의의 실현: 노조, 탄소중립 실현의 주체로 자리매김

○ 일자리의 창출

- 기업 내, 산업 내에서의 일자리 보장을 요구? → 노동자의 산업별·지역별 이동의 불가피성

- 거시적인 차원에서 양질의 녹색일자리(decent green jobs) 창출 + 교육훈련+ 사회안전망 + 비전환자의 생계보장(사회안전망) 등

- 일자리 질의 확보

○ 누구도 뒤처지지 않는 '모두를 위한 정의로운 전환'

- 취약노동자와 더불어 취약계층에 대한 피해의 집중을 방지하고 사회적 대책을 마련

- 사회 불평등의 완화

○ 전환 거버넌스의 참여

- 거시적인 기후정책, 산업전환정책, 노동전환정책 등

- 사회적 대화, 초기업별 단체교섭, 기업 내부의 공동결정

○ 노동권의 보장 및 연대전략

4. “그린뉴딜인가 탈성장인가”

□ 탈성장론

- 탈성장 생태경제학의 대두에 따른 물적 처리량의 제한을 의미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는 성장의 중지가 필요하다고 역설하며
때에 따라서는 탈성장을 실현하기 위한 경제체제의 변화(탈자본주의)를 주장
 - 정상상태경제, 도넛경제, 성장없는 번영, 나아가 생태사회주의, 탈성장 공산주의 등
- ※김병권, 2023. 『기후를 위한 경제학』(좋은책가게) 참조
- 실현가능하고 지속가능한가?
 - 이행주체와 경로설정은? 일자리는 어떻게 보장되는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투자는 어떻게 확보하는가?
- 자본주의 체제에서 탈성장이 가능한가?
- 탈자본주의론: 생태사회주의, 탈성장 공산주의 등
 - 탈자본주의는 어떻게 달성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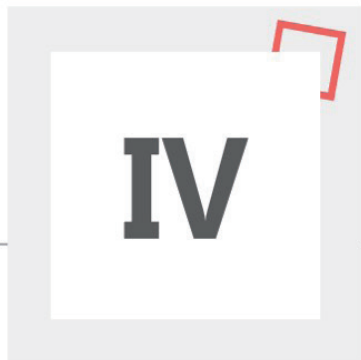
□ 그린뉴딜론

- 그린뉴딜은 여러 갈래로 나뉘지만 공통점은
 - △ 탄소배출 감축으로 경생태계의 복원과 경제와 사회의 탈탄소화를 지향, △ 재생에너지 확대와 에너지 효율화 투자
 - △ 녹색투자의 대폭적인 증대(회색투자의 감축)와 이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경제적 불평등의 해소, △ 국가와 민간의 대규모 투자의 매개고리로서 산업정책의 중요성 강조
- 그린뉴딜로 기후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가(탈동조화 논쟁)
- 그린뉴딜의 진화
 - 2007년 세계 금융위기 속에서 기후변화와 에너지 문제, 일자리와 경제 대안으로 그린 뉴딜 등장(이유진, 2019)
 - 2019년 오카시오-코르테스 하원의원과 미키 상원의원, 기후위기 해결과 일자리 창출, 그리고 경제적 불평등의 해결을 위한 그린뉴딜 결의안 제출,
 - △ 공동체와 노동자를 위한 공정하고 정의로운 전환을 통해 온실가스 제로 달성, △ 일자리 창출과 경제적 번영 안정 보장, △ 재생에너지 100%, 스마트 그리드 구축, 대중교통과 건물에너지 효율화 등
- 민주당 대선후보(Joe Biden, Bernie Sanders) 공약으로 채택
- 상원에서 공화당의 반대로 부결, 하지만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2022)으로 연결

<표> 정의로운 전환 전략의 다양성: 이데올로기적 지향

구분	내용
현상유지	저탄소 사회로의 기업 주도의 전환 / 녹색성장
접근(status quo)	- 영향을 받는 사람들에 대한 보상, 퇴직연금, 일자리 재교육
관리개혁	헤게모니에 도전하지 않고, 기존 경제 체제 내에서 공평과 정의를 개선하는 전환
접근 (management reform)	-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서 고용 기회, 작업 안전 및 건강 측면에서 개선 추구 · 에너지에 대한 접근권과 가격수용성 증시하나, 시민적 통제는 추구하지 않음 - 국제노동: 공공정책을 통한 개혁관리 추구 / 현 경제 모델을 문제시하지 않음 · 사회적 대화와 노사정 협의 증시 / 각국 노동, 거대 환경단체 진보적 기업 등
구조개혁	경제 체제의 구조적 개혁을 추구 / 분배적 정의와 절차적 정의가 모두 지켜져야 함
접근 (structural reform)	- 전환의 의사결정 과정에 포용적이고 공평하게 참여 / 새로운 에너지 시스템의 집단적 소유와 관리 - 시장 권력, 전통적 과학기술에 의존하지 않고, 거버넌스 구조, 민주적 참여와 의사결정, 소유권 등을 포함하는 구조적 해법 모색 - 전환은 단순히 피해자를 보상하는 문제가 아님, 제도와 구조 자체의 개혁이 중요 - 노동자 에너지 협동조합이나 비영리 시민협동조합, 또는 TUED
변혁 접근 (transformative)	오늘날 사회-환경 위기를 만든 경제, 정치 시스템의 완전한 변화 / 성장주의 경제 체제와 인간-환경관계의 근본적 변화 - 계급, 가부장제, 인종주의로 인한 모든 억압 시스템 없애기 - 원주민환경네트워크(IEN), 정의로운 전환동맹(JTA), 여성환경개발기구(WEDO) - 지향은 여러 저자와 단체에 확산, 그러나 방법과 성과는 아직 모호

자료: JTRC(2018) 김현우 하비라 글에서 재인용



자동차 산업의 패러다임 전환

1. 자동차 산업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

○ 국가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

<표> 온실가스 감축목표 조정 내용

(단위: 백만톤CO₂e, 괄호는 '18년 대비 감축률)

구분	부문	2018 실적	2030 목표	
			기존 NDC ('21.10월)	수정 NDC ('23.3월)
배출량 합계		727.6	436.6(40.0%)	436.6(40.0%)
배출	전 환	269.6	149.9(44.4%)	145.9(45.9%)
	산 업	260.5	222.6(14.5%)	230.7(11.4%)
	건 물	52.1	35.0(32.8%)	35.0(32.8%)
	수 송	98.1	61.0(37.8%)	61.0(37.8%)
	농축수산	24.7	18.0(27.1%)	18.0(27.1%)
	폐기물	17.1	9.1(46.8%)	9.1(46.8%)
	수 소	(-)	7.6	8.4
	탈루등	5.6	3.9	3.9
흡수	흡수원	(-41.3)	-26.7	-26.7
제거	CCUS	(-)	-10.3	-11.2
	국제감축	(-)	-33.5	-37.5

(참고) 수송 부문 ('18년) 98.1백만톤 → ('30년) 61.0백만톤 (△37.8%)

□ (추진방향) 육상·해양 항공 등 모빌리티 전반의 탄소중립화

□ 추진과제

○ (무공해차 전환) 전기·수소차 보급 확산* 및 충전인프라를 확충**하고, 경량소재, 저탄소연료기술개발과 함께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대상 확대***

• '30년까지 전기·수소차 450만대(전기차 420만대, 수소차 30만대) 보급을 위한 구매촉진, 공공부문 의무구매 등 [친환경차 비중을 22년의 43만대(1.7%)에서 2030년에는 16.7%로]

** '30년까지 전기차 충전소 123만기 이상, 수소충전소 660기 이상 구축

○ (내연차 관리) 전주기평가를 기반으로 온실가스·연비기준을 상향하고, 대중교통·자전거 등 활성화*를 통해 내연차 수요 관리 강화

* 대중교통 인센티브(환승할인, 요금제 등) 다양화, 개인형이동수단(PM)·자전거의 접근성 강화

○ (철도·항공·해운) 친환경 철도교통 강화*, 친환경연료 확대, 저탄소

선박기술 고도화 등 모든 운송수단의 저탄소화 추진

* 선로 전철화 확대, 전 디젤여객열차 전기열차로 교체('29), 수소열차 개발·실증

2. 자동차 산업 패러다임의 전환

(1) 내연기관체에서 전기차로

- 자동차 산업은 green-digital 전환(참고문헌)의 첨병
 - 그린-디지털 전환에 따른 노조의 대응모형을 형성
- 자동차 산업의 전환은 사회변화(기후위기)와 기술발전(디지털화, 이차 전지 및 정보통신기술), 그리고 행위자(각국 정부의 산업정책 및 기업들 사이의 경쟁)의 주도권 확보경쟁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전동화는 기술이 아니라 사회에 의해 주도되고 있으며 기후 위기 대응과 에너지시스템 전

- 환이라는 맥락에서 이해해야 한다”(박근태, 2023: 15).
- 연비와 속도의 경쟁에서 이동수단이 아닌 서비스기능으로서 소프트웨어의 중요성이 증대
 - 카페와 같은 편안함, 운전의 즐거움 제공, 엔터테인먼트 차박 등
 - SDV(Software-defined vehicle): '바퀴 달린 스마트폰', SDV(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
 - OTA(Over the air) 기술이 핵심

<표> 자동차 산업의 패러다임 성립과 전환

	자동차 산업초기	산업 패러다임 성립	산업패러다임 전환
시작	증기자동차(1878~) 전기자동차(1881~) 내연기관차(1886~)	1908~ 모델 T 출시	2012~ 모델 S 출시
가치 제안	부자들의 사치품, 호화장남감	다목적 대중용 교통 수단	이동 서비스
지배제품	-	내연기관차	전기자동차
생산시스템	장인(수공업) 생산	대량생산	생산시스템 지능화
경쟁력 원천	제품	제품과 제조능력	서비스 플랫폼과 운영 능력
주요연관산업	마차제도, 자전거 산업	기계산업	전자 및 정보통신, 화학·전지, 소재산업

자료: 박근태(2023)

※주요 국가·완성차 업체의 내연기관차 생산중단 목표

- EU, "Fit for 55", 2035년까지 내연기관차 생산 중단
- 노르웨이(2025), 덴마크, 네덜란드 아이슬란드 오스트리아 그리스(2030)
- 독일의 반대, e-fuel 사용?
- GM(2035), 볼보(2030)
- 벤츠(2030), 혼다(2040)
- 현대차 폭스바겐 BMW, 포드, 2040년 ?
- 비야드(BYD), 2022년

<참고> 전기자동차는 친환경인가?

- 전주기 평가: 연료의 수명주기 + 차량의 수명주기
- 자동차생산단계(supply-chain)에서의 탄소배출
- 나라별로는 발전원에 따라 달라짐. 일반적으로 전기자동차 생산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은 내연기관차의 그것의 1.3배에서 2배로 추정

<표> 차량생산 때 발생하는 등가이산화탄소량(CO2eq) 비교

	차체	배터리	합
전기자동차	5.7톤	5.3톤	11톤
내연기관차	6.9톤	0	6.9톤

- 자동차 사용단계(연료 수명주기)
- 전기차의 발전연료에 따라 달라짐
- 높은 에너지 효율을 보이거나 중량의 증가, 난방시스템도 고려해야.
- 전체 수명주기를 고려하면 대체로 전기자동차가 내연기관차보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다(박근태, 2023)

전기차로 1km를 달리면 96g의 이산화탄소가 배출된다. 휘발유차는 1km당 106g(시속 65km, 소형차 기준). 일반차는 배기구로, 전기차는 발전소에서 배출된다는 점이 다를 뿐이다. 전기차의 2021년 연간 평균 주행거리는 2만3800km다. 일반 승용차(1만3000km)의 1.8배이다. 따라서 실제 전기차 1대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휘발유차 대비 약 1.6배가 된다(이재영, 2023).

(2) 전기자동차에서 탄소중립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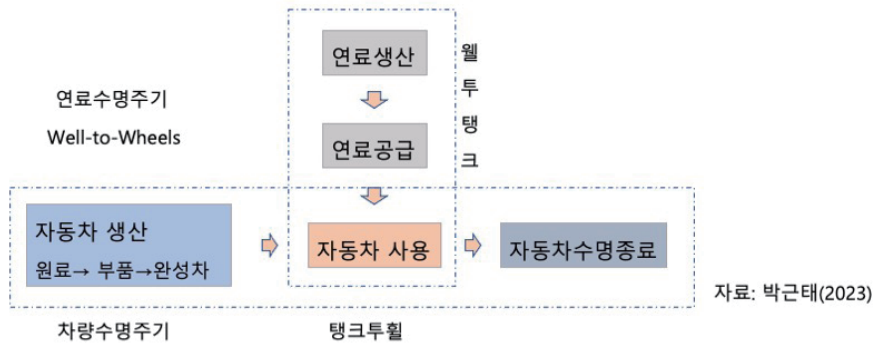
○ 신기후질서의 도래로 인한 환경규제의 강화

- 국제간 협약(파리협약 등)에 기반한 각국의 탄소배출 규제증대(NDC 등)
 - 탄소국경조정세 등 유럽연합 및 국가(미국 캐나다 등) 차원의 규제 움직임
 - RE 100, ESG 등 민간 규제의 증대
 - 최근 들어 미국의 IRA이나 반도체 Chips법, 유럽의 그린딜(핵심원자재법, 탄소중립산업정책법) 등으로 인한 녹색 보호주의의 강화
- 자동차의 생산뿐 아니라 운행에서도 탄소배출 절감이 요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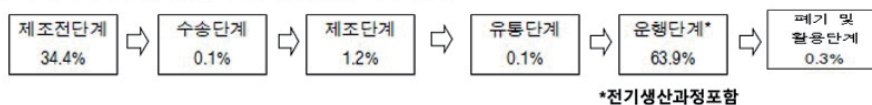
○ 자동차의 탄소배출 측정

- 전주기 평가(Life Cycle Assessment: LCA) 방식이 대두
- : 연료수명주기 + 차량수명주기
- 연료수명주기: 배기가스 규제에서 주행 중 발생하는 모든 환경적 영향(Tank to Wheels)으로, 다시 Well-to-Tank와 결합하여 **Well-to- Wheels**로
 - 차량수명주기: 생산(원료→ 부품→완성차)뿐 아니라 차량의 폐기에 이르기까지 탄소배출량을 측정

<그림> 자동차의 완전한 수명주기 개념



<표> 라이프 사이클 단계별 탄소배출 영향(예: 코나 EV,)



○ 자동차 산업 경쟁력의 원천이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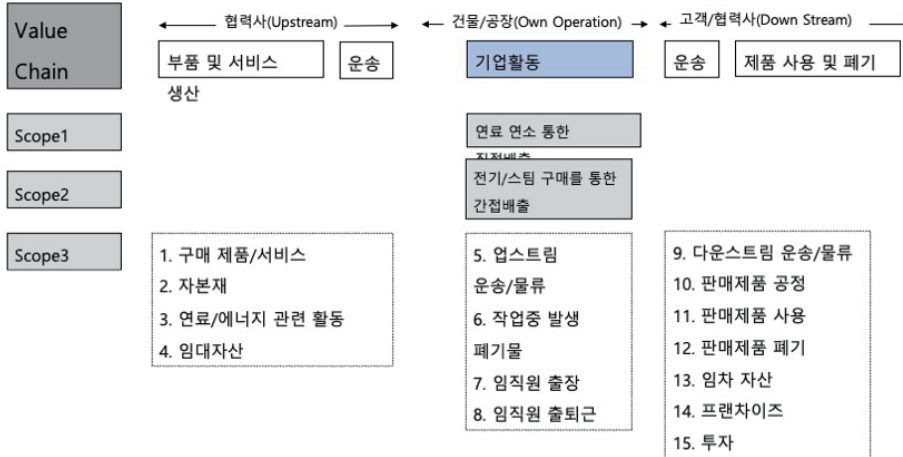
- 탄소중립의 실현
- 신재생에너지 가격의 하락 → grid parity의 달성
- 자원효율성(material efficiency)의 제고
- : 차량의 경량화(소재대체), 소형화, 부품의 재사용 및 재제조, recycling 등, 공유관행의 개선(vehicle occupancy, 증대) 자동차 이용의 집적도 증대
- 자동차의 탄소발자국 감소

- RE 100의 대두

○ RE 100에 관하여

- RE100이란 '50년까지 글로벌 기업의 재생에너지 100% 전환을 추진하는 민간 환경 캠페인
- 화석연료 기반의 전력 대신 태양광, 풍력 등 재생 가능한 에너지 기반의 전력으로 전환함으로써 탄소중립에 기여 (원자력은 제외)
- 대기업과 전력 다소비 업종 기업을 가입대상으로 하는 자발적 이니셔티브
- 전환 목표는 '30년까지 60%, '40년까지 90%, '50년까지 100% 달성해야 함
- 단, 한국 기업의 경우 예외적으로 중간('30년,'40년)목표는 의무사항 아님
- '23.5월말 현재 RE100가입 기업은 408개사
- RE100 이행 범위: 지분 50% 이상 보유 자회사 포함해야 함
- 적격성: 전력량 100GWh 이상, 화석연료 발전 투자계획 無, 제외 산업군 아님
- 가입 기업은 매년 7월 재생에너지 전환 목표와 이행 내역 보고 의무
- 재생에너지 조달: 인증서 구매(GO, I-REC), 녹색요금제, PPA(Power Purchase Agreement), 사업장내 태양광 설치, 신재생에너지 회사 지분투자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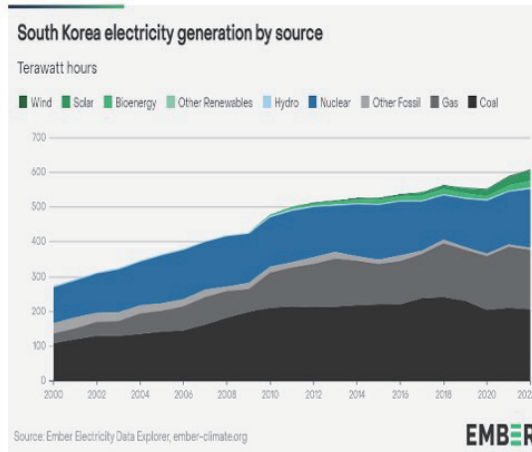
Scope 1(직접배출)	조직경계 내에서 직접 배출되는 온실가스 배출량
Scope 2(간접배출)	조직경계 내에서 전기 또는 스팀 등 에너지사용에 의해 간접 배출되는 온실가스 배출량
Scope 3(기타 간접배출)	상위 및 하위 배출을 모두 포함하여 조직의 가치사슬에서 발생하는 모든 간접적인 온실가스 배출량



○ 2023년 5월 현재 408개 기업이 참여

<표> RE 100 주요 가입 회사

회사명	가입연도	목표연도	국적	비고
General Motors	2016	2035	미국	완성차
Hyundai Motors	2022	2045	한국	완성차
Kia Corp	2022	2040	한국	완성차
LG Energy Solution	2021	2030	한국	배터리
Samsung SDI	2022	2050	한국	배터리
BMW Group	2015	2050	독일	완성차
Continental	2020	2040	독일	부품
Hyundai Mobis	2022	2040	한국	모듈 부품
Hyundai Wia	2022	2050?	한국	부품
TATA	2016	2030	인도	완성차
Panasonic Holdings Corp.	2019	2050	일본	배터리



	발전량(tWh)	비중(%)
Wind	3.4	0.6
Solar	29.1	4.9
Bioenergy	18.7	3.1
other RE	1.2	0.2
Nuclear	168.6	28.2
Gas	170.4	28.5
Coal	205.8	34.5
total	597.1	100.0

풍력과 태양광은 2022년 한국 전력 생산량의 5.4%(32TWh)에 불과해 세계 평균인 12%에 훨씬 못 미친다. 그 결과 한국은 주변국들과 보조를 맞추지 못하고 있다. 일본(11%), 인도(9%)와 같은 다른 아시아 G20 국가의 2022년 풍력 및 태양광 점유율은 세계 평균(12%)에 훨씬 가깝다. 풍력과 태양광의 점유율이 14%인 중국은 세계 평균을 넘어섰다.

그러나 2022년 한국의 원자력 발전량은 28%(169TWh)로 세계 평균(9.2%)보다 앞섰다. 정부는 또한 노후 원전 10기의 수명을 연장함으로써 2030년까지 원자력의 시장 점유율을 30%까지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IEA Net Zero Emissions 시나리오에 부합하고 지구 온도 상승을 1.5C로 제한하려면 한국은 2035년까지 순제로 전력 부문에 도달해야 한다. 한국은 제10차 전력장기수급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2036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31%, 원자력 비중을 각각 35%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순 제로에 도달하려면 청정 전력 생산에 대한 규제 및 재정적 지원과 함께 청정 전력에 대한 정책 목표를 늘려야 한다(**2023.4.**

Ember 보고서에서

3. 현대자동차의 탄소중립 계획

<표> 2019-2021년 Scope1, Scope 2 배출량
단위: tCO₂eq./tCO₂eq./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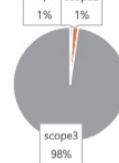
	2019	2020	2021
Scope 1	807,498	716,237	723,966
Scope 2	1,897,885	1,680,079	1,660,238
Scope 1 + Scope 2 합계	2,705,383	2,396,316	2,384,204
배출집약도*	0.603	0.642	0.616

*(자동차 1대 생산 시 발생하는 온실가스)

<표> 현대자동차 RE 100 로드맵

2021년 7월	2022년 4월	2030년	2040년	2045년
RE100 가입선언	RE100 가입승인	재생에너지; 50% 전환	재생에너지 90% 전환	재생에너지 100% 전환

현대차의 탄소배출 구성(2021년)



<표> 2019-2021년 Scope 3 배출량

단위: tCO₂eq./tCO₂eq./대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업스트림 배출량	공급망(원소재 및 부품구매)	20,024,630	17,014,155	18,359,619
	자본재(비품 및 기자재 구매)	265	22	139
	기타 에너지 관련활동(Scope 1/2 제외)	97,253	93,518	149,556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 처리	2,053	1,760	1,911
	임직원 출장	24,836	5,222	7,069
	임직원 출퇴근(통근용 버스)	15,093	14,314	5,911
다운스트림 배출량	생산된 차량의 운송(해운 및 육상)	954,579	655,831	838,575
	판매된 차량의 사용(Tank to Wheel)	97,941,942	81,598,073	80,887,513
	판매된 차량의 폐기(회수 분해 처리)	922,294	780,338	810,794
	임대자산(본사 및 임대 사옥)	4,126	3,325	8,094
	투자(6개 계열사)	394,946	369,926	728,902
Scope 3 합계		120,382,017	100,536,484	101,790,793

<표> 현대자동차 탄소중립 전략적 방향 및 이행현황

분류	목표	이행현황
전동화 전환	-2026년 84만대, 2020년 187만대 확대계획 -2030년 제네시스 브랜드 100% 전동화 전환 -2035년 유럽 100% 전동화 차량 판매 -주요시장 2040년 100% 전동화 차량 판매	- 2021년 전년 대비 40% 이상 증가한 141,101대 판매 (2021년 목표 14만대 초과달성)
수소사업 시너지 창출	수소 모빌리티 확대 그린수소 생성/보급	H2Pro사와 고효율 수소생산기술개발 협업 중 NextHydrogen사와 그린수소 수전해시스템 개발협업중 수소차량 광판확대(2021년, 9620대 판매, 전년대비 41.9% 증가) 글로벌 수소전기차 시장 53.5% 점유율 달성
사업장 탄소중립 추진	2045년 RE 100 달성	-2021년 체코생산법인 전체 전기 사용량중 재생에너지 사용비율 12.8% 달성 -2021년 인도생산법인 전체전기 사용량 중 재생에너지 사용비율 35.5% 달성
공급망 탄소중립 유도	2030년 탄소 10% 이상 감축, 2040년 65% 이상 감축, 2045년 탄소중립 달성	-1차 협력사 대상 온실가스 배출량 조사 및 주요 업체 감축계획 점검

자료, 2022 현대자동차 지속가능성보고서

“무엇보다 제조 공정에서 탈탄소화를 이루기 위해 지금보다 더 많은 재생에너지를 사용해야 한다”

“현대차 기아 전기차 전환 20개사 중 13위, “기술 좋지만 재생에너지 더 써야”(Business Post, 2023.6.1.)

“전기차 선도자 자처한 현대차·기아, 최고 기술력 빛바랜 탄소중립 노력”(경향신문)

재생 에너지 구매 항목에서 11점을 받았고, 전기차 판매 목표도 다른 제조사보다 낮아 ‘전략과 비전’ 항목에서 20점을 받았다. 전기차 품질 항목에서 받았던 높은 점수를 생산 과정에서 대폭 깎아 먹은 것이다.

글로벌 자동차 제조사 전기차 전환 평가 순위	순위	제조사	점수	순위	제조사	점수
(단위: 점)	1	테슬라	83	11	장성기차	38
	2	BYD	73	12	포드	38
	3	BMW	56	13	현대차·기아	38
	4	폭스바겐	53	14	창안자동차	36
	5	스텔란티스	50	15	도요타	30
	6	지리자동차	48	16	혼다	28
	7	르노	47	17	닛산	27
	8	메르세데스벤츠	45	18	타타	27
	9	제너럴모터스	45	19	마쓰다	10
(자료: 국제청정교통위원회(ICCT))	10	상하이자동차	44	20	스즈키	0

국제청정교통위원회(ICCT), 2023. 「2022 세계 자동차 메이커 순위: 누가 전기차 전환을 주도하는가?」

4. 자동차 산업의 패러다임 전환과 일자리

□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

○ 부품수의 감소(30,000 → 18,900개, 약 40%) 및 공정수의 감소(70~80%)

○ 완성차의 경우

- 현대차 1공장(12 전기차 전용라인)의 경우 530명의 인원 중 순수하게는 엔진 서브장 17개 일자리 감소(UPH 감소 포함 44명 감소)

“마치 전기차 양산은 곧 인원감축이라는 논리는 과장됐거나 잘못된 것”(최병승)

- 파워트레인 부문: 전기차로 전환되면 없어지는 부문, 따라서 전기차 전환속도에 비례하여 인원도 감소

- 전체적으로 평가하면 전기차 전환으로 인원은 감소하지만 △전환이 점진적인데다 △자연감소(퇴직)의 활용, 그리고 △내적 유연화(전환배치 등)를 통해 일자리 감소를 흡수

※ 타완성차(외투기업)의 경우에는 본사로부터 미래차 물량배정이 없음

○ 부품사의 경우

- 수직계열화된 가치사슬(전속형) 속에서 내연기관차 부품기업은 전장화 부품의 개발은 물론 사업다각화나 사업전환이 필요

- 연구개발을 위한 인력이나 자금의 부족을 경험. 마케팅 개발노력도 필요하나 ...

- 신규 생산물량을 위해 자회사를 설립하거나 외주화하기도(‘그린필드’?)

→ 심각한 고용위기를 초래할 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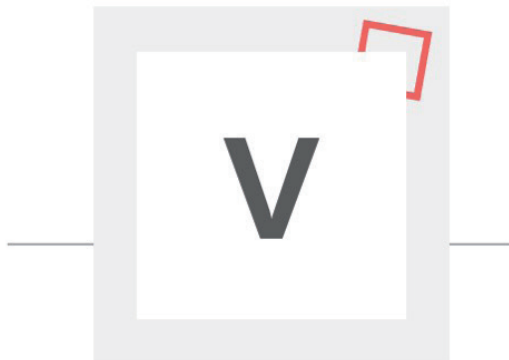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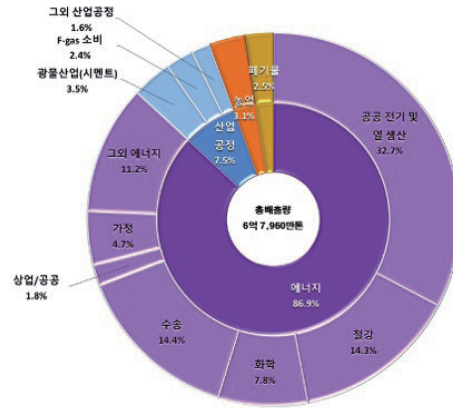
- 이외 정비나 판매 등도

“향후 고용의 감소는 전기차보다도 자동화와 디지털화에 따른 영향이 더 클 것”

“하지만 디지털화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이중적이다. 결국 그 영향은 결국 물량, 즉 해당 산업의 경쟁력이라는 변수에 의해 좌우될 것”

“기술로 대체되는 일자리가 그 기술에 힘입어 경쟁력이 향상되면 더 많은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문호: 345). 이는 탄소중립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일 것

(참고) < '21년 분야별 온실가스 배출비중 >



노동조합의 대응

1. '정의로운 전환전략의 다양성'

- 노동조합 대응양태를 중심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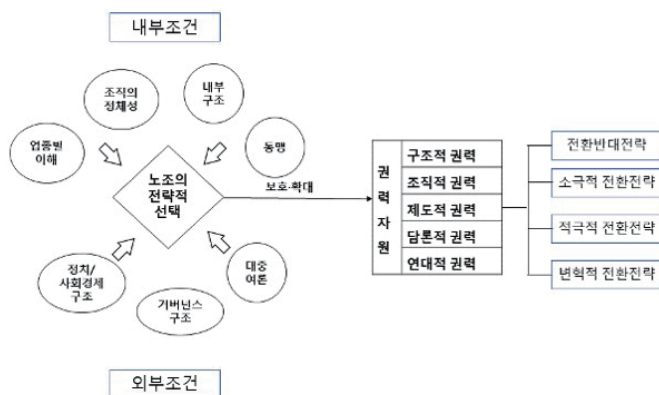
○ Thmas and Doerflinger, 2020

- 반대(opposition), 조건부 지지(hedging), 그리고 지지(support)

○ Kalt(2022)

- 반대(oppositional) 전략: 기존 고용의 보호와 기후를 이유로 한 탄소배출 공장의 폐쇄에 반대(고용과 환경 사이의 제로섬 게임)
- 소극적(reactive) 전략: 환경규제와 화석연료의 폐쇄에 찬성하나 천천히, 점진적으로 접근하길 희망 (Thomas 등의 hedging 전략과 유사) .
- 적극적(affirmative) 전략: 기존의 제도 내에서 생태적 현대화론의 패러다임을 추구(녹색성장). 기존의 해게 모니에 도전하기보다는 기존의 경제체제 내에서 보다 큰 평등과 정의를 추구(JTRC, 2018)
- 전환(transformative)적 전략: 녹색자본주의를 거부하고 기존의 권력관계는 물론 경제체제와 제도에 도전

<그림> 녹색이행과정에서 노조의 전략 결정을 위한 설명 틀



자료: Kalt, 2022.

□ 기후위기 대응과 노동운동의 정체성

○ 파편화된 실리주의(fragmented economism)

- 정규직 중심의 운동, 주변노동자층의 존재
- 기업차원의 집중, 경제주의 지향 → 기업별 교섭에 치중, 사회적 연대의 부재

"실리주의 이데올로기를 가진 노조는 (기후위기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보다) 그들의 활동을 임금과 노동조건에 관한 단체교섭에 제한하고 기존 조합원의 이해를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Kalt, 2022). + 기업별 체제(제한된 권력자원)

○ 사회적 조합주의(social unionism)

"사회적 의제를 자신의 고유한 영역에서 추구하는 노동운동"

- 노조가 사회적 의제(social concerns)를 추구함으로써 한편으로는 사회통합을 지향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적 지지와 공감을 얻는 일을 말함.
- 기후위기 대응과정에서 '저탄소 경제를 향한 포용적인 전환'(inclusive transition to a low carbon economy)을 지향(Thomas, 2021).

○ 혁명적 조합주의(revolutionary unionism)

2. 탄소중립을 위한 노동조합의 대응 원칙

□ 정의로운 전환의 내면화

○ 탄소중립 실현의 내면화: 기후위기 의식과 대응의지(climate literacy), 조합원 교육

- 노동조합으로서의 속도 조절이 대안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해야

○ 탄소중립을 위한 적극적인 대응

- 산업측면에서의 대응(기후위기 대응을 경쟁력으로?)
- ESG 경영(지속가능경영), RE 100?
- 생산공정의 변화(에너지 효율화). 건물 리모델링, 친환경 운송수단의 활용 등

○ 고용보장 원칙의 확립

- 탄소중립의 과정에서 누구도 뒤쳐져서는 안된다(No one left behind)
→취약 노동자에게 초점을 맞추는 포용적인 전환(Just Transition for All)
- 사회적 연대의 원칙 공동체 노조주의의 확립)
- 사회적 의제(불평등의 치유 및 공공성의 확립)에 대한 노동조합의 폭넓은 관심(사회적 노조주의)

<참고1> 탄소중립실현을 위한 산업전환은 구조조정이 아니다

- 구조조정은 개별기업 차원에서의 경영실패가 낳은 산물이라면
- 산업전환은 탄소중립의 실현을 위한 정책적인 과정이고 관련 전체 기업이 영향을 받는다('기후적 실업')
- 국가차원에서 정부의 강력한 개입(규제와 지원)이 필요한 영역(산업정책과 노동전환 지원)
- 국가의 개입이 따르지 않을 경우 개별기업은 구조조정의 차원에서 대응: 인원의 감축이나 외부화(자회사)등 → 갈등유발적 대응

<참고2> “재난은 아래로 흐른다”

-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 부품회사 노동자에 대한 관심
- “취약노동자를 외면하고 정의로운 전환을 주장하는 건 자기모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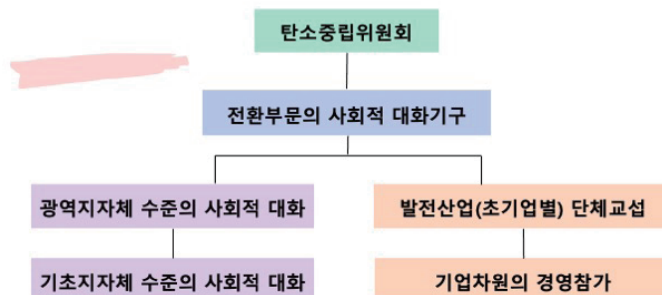
빈곤층은 환경 재해에 노출될 위험의 불평등뿐 아니라 대처하는 수단의 불평등도 문제다. 취약노동자는 전환리스 크에 노출될 가능성이 클 뿐 아니라 노사 공히 대처능력이 모자란다. 결과적으로 환경불평등은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강화한다.

→ 불평등을 줄이면서 환경을 보호하는 방안으로서의 정의로운 전환

○ 노조 참여의 원칙

- 사회적 대화, 단체교섭, 공동결정 등

<그림 5>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증층적 거버넌스의 구성



○ 연대전략

- 사회적 조합주의의 핵심전략, 연대
- 연대전략이란 노조가 다른 조직으로부터 자원과 영향력을 빌려 자신의 역량을 증대시키는 것
- 연대전략을 통해 노조의 정책에 대해 폭넓은 사회적 합법성을 획득하고 사회적 영향력을 확대(Thomas, 2021). 이는 기후정책에서도 마찬가지.
- 연대의 원칙
- 연대는 차이를 인정하면서 최소한의 공동의 목표를 향해 뭉치는 것
- 실리와 사회적 의제를 연결시키는 과정
- 노동조합 사이(완성차-부품)/ 노조-환경단체/ 노조-지역공동체(공동체 노조주의)
- 사회연대를 통한 사회권력의 획득 등을 통해 사회적 차원에서 탄소중립의 실현, 그리고 정부 및 기업에 대한 영향력 증대

3. 우리나라 노동조합의 대응

- 이정희(2023) 참조
- 노조 간에도 기후위기 인식이나 실천내용 및 실천여부에는 편차가 있음. 직접적인 고용위협에 직면한 경우(석탄화력, 자동차 등)를 제외하면 기후위기 대응을 노조 활동의 우선순위에 배치하는 사례는 드문 게 현실임(이정희, 2023).
- 사실상 그 대응도 기업차원에 그치고 있으며 기업 내의 일자리 보장에 주력하는 경우가 많음. 비정규직이나 하청 노동자 등 주변 노동자의 소외가 이뤄지고 있음.
- 대응수단에서도 사회적 대화나 초기업별 업종별 교섭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으며 기업 내부의 공동결정도 이뤄지지 않은 상황임
- 전반적으로 기후위기 인식이 취약한 가운데 부분적으로 경제적 실리주의(일자리)에 집중하는 실리적 시장중심의 대응이 이뤄지고 있음. 부분적으로 사회중심모델이 나타나고 있기도 함.

○ 금속노조의 산업전환협약(2021.8)

“금속노조와 회사는 디지털화·자동화·전동화 및 기후위기에 따른 산업전환 시기 회사의 지속 가능한 미래 발전과 고용안정, 양질의 일자리 확보를 위한 투명한 경영전략을 기반으로 책임 있는 산업전환 대응계획을 함께 수립하고 실행한다”

- 산업전환 대응계획은 △고용안정 및 양질의 일자리 확보 △신기술 도입 관련 직무 교육·훈련 △노동안전 및 인권보호 △기후위기 대응 △공정거래 등 5가지 큰 틀의 의제·방향을 바탕으로 논의한다.
- 한계도

○ 현대차, 「국내공장 미래 투자관련 특별합의서」(2022.7.21.).

회사는 미래 자동차 시장에서 선도기업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전기차 생산능력 확대 및 직원들의 고용안정을 위해 중장기적으로 국내공장 투자를 적극 실시하고 노조는 국내공장 투자와 연계된 제반 사항과 제조경쟁력 제고를 위해 적극 협조한다.

- 전기차 전용공장 신설(2025년 양산목표)
- 미래 신사업 대응 및 공장내 전동화 모듈 부품의 조립생산 추진
- 미래 산업변화 대응관련 인적 자원(직원) 개발
- ‘국내공장 대내외 리스크 대응 노사협의체’ 구성

○ 기아차노사, 미래협약

→ 산업전환을 위한 노사의 호혜적 역할을 강조

○ 노동조합의 대응평가

- 탄소중립을 위한 사용자의 대응이 지체됨에 따라 노동조합의 대응도 지체됨
- 산업전환협약은 선언적인 성격이 강함
- 노동조합의 관심도도 낮으며 그나마 기업내의 고용문제에 집중

- 사실 탄소중립과정에서 노동조합의 영향력은 제한적
- 경영참가(공동결정) 수준의 미비 → '생산지점에서의 정의 실현'?
- 기술적·경제적 합리성에 포박(구동모터 외부화, 차체재료, 아키텍처 등)

결론적으로 기술적 합리성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는 행위자들의 개입, 즉 기업의 생산전략과 이에 대한 노동조합의 대응이 생산시스템에 미치는 제품 혁신의 영향을 조절할 수 있지만 기술적인 합리성을 넘어서까지 조절할 수는 없다(박근태: 185)

- 파편화된 실리주의로서의 기업별 교섭체계 → 정치적·정책적 개입의 한계

4. 노동조합의 대응 방향

□ 조합원의 참여·동원에 기반한 대응체제 구축

- 기후위기 관련 정책개발, 조합원 기후교육, 노조 내 관련 부서의 설치 등
- 탄소중립대응의 속도조절이 아니라 적극적인 대응을 통한 경쟁력의 확보와 이를 통한 고용의 보장 및 창출
- 탄소중립 주체로서 노동조합의 위상을 확립

□ 노조참여적인 거버넌스의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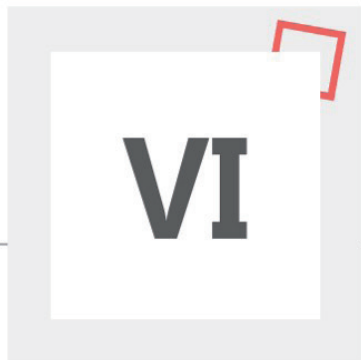
- 산별중심적 대응: 기후정책, 에너지 정책, 산업정책, 고용훈련정책 등
- 사회적 대화, 업종차원의 단체교섭 및 기업차원의 공동대응체제의 구축

□ 사회연대전략의 구축

- 사회적 의제의 내면화
- 취약 노동자,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와 사회안전망('정의로운 전환')

□ 통합적인 고용·훈련정책

- 자동차 산업정책
- 과학기술정책(기계, 소재, 전기전자, IT 등)
- 에너지정책(탄소중립)
- 중소기업정책
- 고용·훈련정책
- 사회안전망정책
- 정부주도형 방식이 아닌 이해관계자(노동조합)가 각 수준의 정책의 결정방식이 참여하는 의사결정방식(거버넌스 구축)이 필수적
 - 특히 거시적인 기후정책은 물론 산업전환정책의 형성과정이 참여하고 이를 노동정책 및 사회안전망 정책과 결합하려는 노력이 중요
 - 정책과 고용은 1:1로 대응하는 인과관계가 아니라 고용은 다양한 요인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 따라서 Navigation 방식이 필요. 사전에 경로를 설정하되 주어진 상황에 따라 경로를 재검색하는 시스템.



맺음말

- 탄소중립, 기후위기 대응에 관한 한 한국은 초기 단계
 - 기후위기의 심화와 직간접적인 국제압력 → 정부가 지체되고 느슨한 대응 → 급격한 기후대응이 불가피
 - 산업전환, 노동전환에 미치는 영향도 클 것
- 전반적으로 기후정의의 실현에 무관심한 노조
 - 기후정의는 물론 사회정의의 실현(불평등의 제거)보다는 기업 내의 일자리 보장에 초점
 - 비정규직, 하청노동자, 부품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산업전환정책과 노동전환정책
 - 기후정의 실현을 위한 노동조합의 노력(기후연대를 기반으로 기후정치)
- 결국 경쟁력이 고용을 보장할 것(그린뉴딜전략)
 - 정부의 산업정책을 통한 적극적인 녹색 투자 + 기업 투자를 유인
 - 새로운 기후·통상질서에 부응
 - 기후위기 대응 + 일자리 창출 + 사회불평등의 해소
 - 그린뉴딜전략을 과도기로 삼아 탈성장으로 이행하는 계기?
- 노동조합의 노력
 - 노동참여적인 정책결정(거버넌스의 구축)을 통한 산업·노동정책의 수립
 - 노동조합의 정책 역량 강화(산별차원), 조합원 교육을 통한 대응체제 정비

<표> 작업장 녹색화를 위한 단계별 가이드

순번	단계	개요
1	정보수집	에너지청구서, 환경문제 등 작업장의 이슈를 조사하기 위해 체크리스트를 만들고 노동자 서베이 등을 통한 정보 수집
2	계획수립	환경 인식 제고, 친환경 기술 도입 등 작업장 녹색화 목표 설정 및 계획 수립
3	관리자와 공동행동	에너지와 자원활용 등 환경 이슈가 노조 아젠다에 반영될 수 있도록 기존 노조 관리자 측과 협의
4	실행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들을 주변에 알리고 그린네트워킹 등에 노하우를 공유
5	녹색이벤트, 녹색축제 진행	더 많은 환경문제와 개선사항을 찾아내기 위해 행사 진행
6	조합원 참여	더 많은 노동자가 노조의 참여의 중요성을 알 수 있도록 환경활동에 별도 시간을 마련하고, 인식제고 활동 등을 지원
7	친환경교육	인식제고와 환경활동 지원 확대를 위해 강사 섭외 등 교육 실시
8	활동에 대한 평가와 검토	더 효과 있는 활동을 위해 활동 기록하고 공유

자료: ETUC, 2012; 김현우 외, 2021.

기후위기, 미래 공포 아닌 오늘 우리에게 닥친 위협이다



감사합니다